

與野 선거구 확정 시한 넘긴 이유 있었네

현역의원들 경쟁자 선거운동 원천봉쇄 효과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후 담판 통한 돌파구 모색할 듯

여야는 원내지도부가 최근 약속한 20대 총선 선거구 확정 기준 제시일(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역할을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19일까지 가동하지 못했다. 다만,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오는 23일 오후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확정 기준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또다시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오는 23일 오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연 의원이 같은 일정을 확인했다.

여야가 애초 20일을 목표로 정했던 선거구 확정 기준 마련 시한을 또다시 연기

한 것은 양당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확정을 빨리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현직 의원들은 이미 정치신인들보다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선거구를 빨리 확정해서 경쟁자들에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여야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3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선거구 확정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지난 10~12일 3일간 여야 최고 지도부가 ‘마라톤 담판’에 나섰다

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실무급인 정개특위 여야 간사 간 차원에서 접점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란 지적도 나온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확정 기준을 합의해 확정위로 넘기라고 합의한 것은 사실상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면서 “솔직히 지도부도 해결 못 한 문제를 특위가 합의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여야 지도부 모두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5일 전까지는 선거구 확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간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만일 이 시한마저 무위로 돌릴 경우 양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폭증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여야간 입장은 다 드러났고, 사실상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는 점에서

지난번 ‘4+4 회동’처럼 결국 여야 최고 지도부가 나서면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번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린 253석으로 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역구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현행 국회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감축에 반대하며 의원정수를 약간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정당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수를 늘려 ‘이병석안’을 수용하자고 맞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끝내 협상에 실패한다면 현행 체제(지역구의원 246석, 비례대표 54석)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대통령 7시간 행적조사 막아라”

세누리, 세월호특조위 안전 통과에 “월권 행위”

새누리당은 19일 세월호조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전날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전을 통과시키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자 특별위원회의 ‘파행적 활동’이라고 반격하며 이 안전이 전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을 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안종대 의원과 문정림 원내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대통령의 7시간”은 작년 7월 세월호 특위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안임에도 특별위가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작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된 것”이라며 “특별위의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 성향 특조위원들의 활동 시한 연장 요구를 일축하는 한편,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구성원들의 언행과 처신을 비난하면서 특조위의 공신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조위는 올해 예산으로 직원 자녀 학비, 생일과 케이크 비용, 명절 휴가비 등이 포함된 예산을 청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최근에는 특조위 상임위원 5명 전원 임에도 특조위가 재조사하겠다는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월급으로 약 7000만 원씩 소급 수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밝혀라”

새정치 “찬성 서명지 인쇄소서 직송…국민의견서 공동 열람을”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서 작성이 조작됐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반대여론이 높아지니 (확정고시) 이를 앞당기면서 아예 차떼기로 찬성 서명용지를 인쇄소에서 직송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견서 서명 여야 공동열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짜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교육부에 전달된 찬성의견서·서명지의 ‘조작·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한 인쇄소에서 수만장의 찬성 의견서 출력·인쇄 작업이 이뤄져도 이렇게 왜곡,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

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 과정에 걸쳐 장기간 보였던 모습은 불법과 위법, 꼼수, 거짓, 오만과 독선, 일방통행식 추진이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과거 대선자금, 정치자금 ‘차떼기’ 의혹이 있었는데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을 조작하는 차떼기를 여야가 함께 공동열람해 진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위 수석부위원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만든 국정교과서도 이렇게 왜곡, 조작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눈에 선하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평가위, 현역 성적 평가 돌입

공약이행실적·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내년 총선 공전에 앞서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물갈이를 위한 평가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오동석 평가위 대변인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행세척 예정인 18일부터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 평가에 들어갔다”며 “이제 평가위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가위는 당무감사원에 의원들의 지역 활동 평가를 위한 당무감사 실시 공문을, 각 의원실에는 총선공약 이행 평가를 위한 공약이행실적 양식을 보내기로 했다.

또, 원내 행정실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다.

평가위는 일부에서 평가결과 누출 및 조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 이들을 암호화, 평가위원이 내용과 접수만 평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로드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 평가결과를 미리 보지 못하도록 했다.

평가위는 평가기준상 의정활동·선거기여도·다면평가·여론조사 등 대분류의 배

점은 혁신위원회 안을 그대로 존중하되 중분류 항목은 3주 가량 평가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뒤 최고위 보고를 거쳐 공표하기로 했다.

당직 활동 등으로 의정 활동에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기여도 부분에 반영하고 상임위 출석 등 성실성 평가 부분은 균형을 맞춰서 풀림 현상이 없도록 배점에 나선다.

평가위에 제출된 자료의 편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사안들을 감안, 진실성과 관련해 추가 자료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걸러내려는 방침이다.

조은 평가위원장은 “공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서 국민이 갖고 있는 정치 피로감, 정치 혐오감을 덜어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에서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계량화, 지역별 정치적 특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평가위 활동 및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내 관계자는 “평가위가 최대한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계량화 부분에서 완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정치적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는다는 점에서 평가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밀’한 文-朴 19일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라홀에서 열린 ‘고단한 미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토지 투자전략!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삼성전자 산업단지 개설과 LG전자 산업단지 이전계획 등 개발호재가 넘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 평택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치가 높고 성공투자가 기대되는 개발지 평택에서 숨은 1%의 노른자위를 찾아라!

강의내용

- ❑ 평택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전망
- ❑ 평택 투자 유망지역은 어디인가?
- ❑ 평택에서 저렴하고 투자가치 높은 땅 사는 법
- ❑ 토지시장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행복한 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11월 24일(화)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1~213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ORC) 원부동산자문상담소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